

사설

다전공 의무화, 선언보다 준비가 먼저

202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다전공·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교는 이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설명한다.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의 정도다.

한 학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러한 준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학교는 다전공 의무이수제의 큰 틀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완료했지만, 실제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과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

다전공 의무이수제는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졸업 요건을 바꾸는 사안이다.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 선포부터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학과에서는 선수강 과목을 이수해야만 다전공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입학과 동시에 학과를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학생은 이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학과마다 상이한 선수과목 기준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는 통합된 기준과 안내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는 이러한 지적에 “제도를 도입한 뒤 문제를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예상되는 수요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신설될 ‘미래교육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이수 체계와 안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지난 3월 출범할 계획이었던 미래교육처는 현재까지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제도를 총괄할 조직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자율·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에서 나타났던 특정학과 쏠림 현상(서울캠 경영대학, 국제캠 전자정보대학)이 다전공 선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수요 예측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학교는 준비 미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2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고 신입생 대상 안내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졸업 요건과 직결되는 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준비는 제도 시행 이후가 아

니라 선포 이전 단계에서 완료됐어야 할 사안이다.

제도는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졸업 요건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은 그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는 이제라도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교육처 신설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논의를 지체 없이 본격화해야 한다.

논의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전공 신청·승인 통합 기준, 학과별 특성 반영 원칙, 다전공생 이수 및 평가 방식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포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제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 또한 대학의 책임이다.

세시봉

우리의 적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6·3 지방선거 중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긴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렸고,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투표가 이어지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된 순간이었다.

선거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정식 투표함이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유권자를 기만한 셈이다.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터무니없는 선관위의 해명이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설명이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기관이 정작 투표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투표용지 수량 확보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선거 중 벌어지는 정쟁과 토론, 때로는 거친 말싸움마저도 결국 민주주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며, 다시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는 이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에 대한 불신과 미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0.1%포인트 오른 고무적인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실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논산시 제1선거구에서는 단 1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민주주의에서 한 표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들은 그 한 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투쟁해왔으며,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는 가장 큰 우리의 적이었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경희의 축제를 위하여

‘대동(大同)’을 찾아서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대동제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다 놀란 지점이 있다. 1956년 10월 열린 우리학교 ‘제1회 대학제’가 전국 대학 최초의 축제이자 현재 대학 축제의 태동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축제는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연주회부터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한 운동회, 법학대학 모의재판, 국문학회 학술발표회 등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대동제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대학의 학술과 문화 역량을 나누는 공동체 장으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축제를 맞은 캠퍼스는 온통 연예인 라인업 이야기를 하기 바쁘다. 단톡방부터 커뮤니티까지 어떤 가수가 오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고간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무대 라인업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다.

온 신경이 외부 연예인에게만 쏠려 있다 보니 정작 우리학교만의 축제 문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연예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 공연이 축제의 큰 재미라는 점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를 즐기는 게 축제의 전부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동제(大同祭)’라는 이름처럼 축제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데 있다.

그렇기에 연예인 이름값이 축제의 전부가 된 현실은 씁쓸하다. 학생이 지워진 캠퍼스는 외부에서 빌려온 화려한 무대를 소비하는 대기실로 전락할 뿐이다.

축제가 연예인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어느 학교에나 있는 흔한 라인업 경쟁만으로는 경희의 축제를 설명할 수 없다.

빌려온 화려함에 머무르기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참여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본래의 의미를 이어갈 때, 70년을 이어온 대동제는 비로소 ‘우리의 축제’가 된다.



만평 지워진 대동의 의미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